

02 제348회 임시회	08 농수축경제위원회
03 의회운영위원회	09 교육위원회
04 행정자치위원회	10 입법정보
05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2 사무처 소식 /
06 환경도시위원회	청탁금지법 Q & A
07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 의정 소식

Dreamjeju 21

발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발행일 2017. 3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전화 064-741-2235 | 팩스 064-741-2219 | <http://www.council.jeju.kr>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제주

제주의 3월, 파란 하늘과 푸른 풀잎이 싱그러운 시간입니다.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3월의 문을 엽니다. <김기삼 작>

“정책이 빛을 발하려면 도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제348회 도의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23건 처리

올해 의정활동의 문을 열었던 제348회 임시회가 2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의 새해 업무 보고와 각 실국에서의 주요업무보고, 도의회 각 당 원내대표들의 대표의원 연설을 비롯하여 조례와 동의안 등을 처리하고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된 안건은 조례안 19건, 동의안 4건 등 모두 23건이다. 신관홍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지난해 통과된 예산안이 제주발전과 도민복지를 위해 어떻게 쓰일 것 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말하고, “이제부터는 예산의 효과가 도민 사회에 빠르게 파급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특히 어렵고 소외된 곳에 계시는 도민들을 위한 예산의 조기 집행은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일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기에서도 많은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면서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범사업 기간 연장과 하수처리난, 꽃자왈 훼손 등 환경정책, 중국인 관광객 감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응책, 풍력발전 안전관리 문제, 그리고 항일기념관 대관 문제, 세계 섬문화축제와 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된 설문조사, 농정보조사업 배점기준 문제 등 정말 다양한데, 문제는 복잡하지만, 도민을 우선 생각하면 오히려 간단한 답이 나온다.”면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신 의장은 또 “교육행정 또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교육청 산하 기관의 조직운영 문제, 청소년 거리 지정의 문제점도 제기됐다.”면서 “평교사 출신이 갑자기 교장공모제라는 이름으로 교장으로 승진·임용된다면, 더욱이 교육자의 입장이려면 수긍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의장은 마지막으로 “새롭고 변화된 모든 정책이 빛을 발하려면 먼저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 이번 회기가 준 소중한 교훈”이라고 강조하고 “도민과의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도민적 이해와 합의를 도출해내야 비로소 상생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모레가 우수인데, 따뜻한 봄기운에 눈이 녹아내리듯이, 제주의 현안들도 하나하나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길 기대한다”면서 폐회사를 마쳤다.

도의회, 도교육청과 정책협의회 정례화한다

제주도 교육정책협약에 관한 조례 통과
주요 정책에 대한 협의와 공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한데 이어 도교육청과도 정책협의회 정례화가 이루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16일 열린 제34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제주도 교육정책협약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교육청과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주요 정책에 대한 협의와 공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도의회와 도교육청 간에 정책 소통을 강화해 나갈 수 있게 됐다.

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정책협의회는 2008년 제정된 '제주도 정책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해 왔으나 제주도교육청과의 협의회는 별도의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마련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도와와의 정책협의회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지난해 8월과 10월, 올해 1월 개최한 반면 도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는 반년에 한 번씩을 원칙으로 마련해 왔다.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10대 후반기 의정목표는 '공감, 소통, 창조 의정 구현'으로 정하고, 3대 분야 전략과제로 의정체감도를 높이는 공감 의정 구현, 배려와 협력하는 소통 의정,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창조 의정으로 정책협의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분 발언

관덕정 광장 복원, 막연히 추진해선 안 된다



이 선 화 의원

"관덕정 광장 복원사업과 차 없는 거리 추진과정 절차적 정당성 결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선화 의원은 2월 16일 열린 제3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선화 의원은 "지난해 9월에 열린 '원도심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해서 도시재생사업은 제주도민이 앞으로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젠다이기 때문에 행정은 무엇보다 주민들과의 민주주의적인 소통 과정에 가장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지난 2월 8일 삼도2동 주민센터에서 '관덕정 광장 복원사업' 설명회가 열렸는데, 제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설명회 일정도 언론을 통해서야 알았다."면서, "도 관계자를 불러 사전에 지역구 의원과도 논의하지 않은 점과 차 없는 거리가 될 경우 지역상권의 피해, 지역주민들의 불편, 주민 의견 수렴 미흡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도는 이를 무시하고 설명회를 계획대로 추진했고, 결국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설명회는 파행으로 끝났다."면서,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민주적 소통의 절차적 정당

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 설명회를 통해 증명된 것"이라며, "원도심 활성화도 좋고 문화재생, 도시재생 다 좋지만, 원도심 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낙후된 '경제를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문화도 경제 활성화를 담보하는 정책이라야 하고, 도시재생도 경제 활성화가 되는 장치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관덕정 광장 복원, 막연히 추진해선 안 된다. 지역주민과 지역상권에 비전을 줘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주민과 지역상권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인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합의하는 사업이 되어야 하고, '주민 의견 수렴'이 정책추진을 위한 형식적 명분 쌓기나 통과리례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차 없는 거리 구역은 제주시 동서 간선도로를 잇는 중요한 도로다.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려면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연계해 교통우회대책, 방문객들을 위한 대규모 공용주차장 확보, 기존 상권의 보호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분명한 대안제시가 있어야 한다."며, "다소 늦게 갈지라도 빠르게 가는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강정 문제는 끝을 향해 가야 합니다

"이제 강정 문제는 끝을 향해 가야 합니다."

강정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정화 의원이 2월 16일 제3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주장한 말이다.

현정화 의원은 "모레가 완연한 봄을 알리는 우수이지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은 곳이 있다. 바로 강정이다."고 전제하고, "이런 상황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무려 10년, 강산이 한 번 변하는 기간 동안 쭉 이어져 온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오죽하면 도민사회 통합의 최우선 화두는 '강정'이라는 말이 나오겠느냐."면서, "원희룡 지사께서도 도지사 후보 시절부터 이런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이에 따라 '주민주도 진상조사 실시 공약'을 제시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해군의 군 관사 및 해군기지 공사 강행으로 공약이 무산되고, 이후 해군의 구상권 청구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현 의원은 "그 사이 민간복합형 관광미항은 준공되어 군사기지로써 또 관광

미항으로서 역할을 시작했다. 어찌 보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강정에서, 또 제주에서 얻은 것은 다 얻었다. 구상권 청구를 통해 공사를 담당했던 기업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고 말하고,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잃은 것만 있고,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국책사업을 추진했는데도 주민의 입장에서는 극한 갈등으로 친인척과 친구 간에도 척을 지고, 재산상의 피해도 컸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강정 문제는 끝을 향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이제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면서, "구상권 철회를 위해 원희룡 지사님이 선두에 서서 전 도민이 함께 나서서 풀어 줄 것, 공식·비공식 차원의 갈등 프로세스를 작동, 지사께서 마을 주민들을 직접 만나야 하고, 사회협약위원회에 갈등관리방안 모색 요청, 제주의 가장 우선적인 대선 공약으로 요청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강정 문제가 주민들 편에서 끝나는 날, 우리는 비로소 화합과 통합을 말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현 정 화 의원

제주항공사는 제주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고 태 민 의원

"제주항공사는 제주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 의원은 2월 16일 오후 2시 열린 제348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고 의원은 "논어에 계지재득 견리사의(戒之在得, 見利思義)라 했다. 얻는 것에 있어 조심해야 하고, 이익을 볼 때 의리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라고 강조하고, "지금 제주항공이 곱씹어야 할 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고 의원은 "지난 2001년 당시 제주 방문객 90% 이상이 항공에 의존하는 실정에서 항공사들의 자의적 요금 인상과 노선 감축 폐지 등이 빈발하고 있었다."며, "항공사들의 운항 정책에 휘둘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도정과 도의회, 도민 사회는 분연히 일어났던 것"이라고 제주항공 탄생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제주항공이 오늘날 국내 저가 항공업계 1위 업체로 성장할 때까지 도민들의 제주항공 사랑은 계속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의사

를 무시하고 콜센터를 폐쇄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주 본사가 페이퍼 컴퍼니 수준이 아니고 무엇이나."고 토로했다.

고 의원은 또 "제주항공의 모태는 제주도와 제주도민이다. 낳아준 부모에게 나이 들어 힘이 없다고 보은하진 못할망정 내팽개치는 경우와 다름이 없다. 참으로 도리에 어긋난다."며, "제주콜센터 문제는 단순히 53명의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 문제가 아니라 65만 도민에 대한 신뢰관계 문제다. 콜센터 폐쇄는 도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후 나타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주항공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고 의원은 마지막으로 "동종 업체인 에어부산은 지역에 사육까지 짓는 등 부산시민 기업으로 사랑받고 있다."면서, "제주항공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특히 2004년 12월에 제주도와 체결한 협약서를 들여다보고 창업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주도민들의 사랑을 받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

“2017년은 청렴도 1등급 달성의 해”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석 의원)는 2월 15일 제348회 임시회를 속개,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의회운영위원들은 청렴도 평가, 국내·외 의회와의 교류에 대한 전략과 프로그램 개발, 품위와 기능을 살린 청사 조성, 중앙부처의 정책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 대응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서는 의원, 직원 등 관계자들이 평가 세부 항목 및 내용 등을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음 청렴도 평가에서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와 모든 관계자가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국내·외 의회와의 우호증진 및 자매결연 활동, 기관 상호 간의 공동 관심사나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국제교류 전략과 프로그램이 모색되어야 하고, 국제교류를 위한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 연수 편성기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품위와 기능을 살린 청사 조성에는 휠체어 이용자 등 이동 약자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즐겁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의 날 운영, 탄력근무제, 육아 휴직 등 여성가족부의 가족 친화 기관 인증 추진 및 의회 본관 로비에 작품을 전시하면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많은 도민이 우수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 당부 말씀이 있었다.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운영은 순수 모의경연대회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여 줄 것,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 홍보 및 입법지원체계 개선 연구용역은 향후 10년의 발전방안을 위해서는 지난 10년의 성과 또는 평가 분석이 필요하고 도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담아내어 내실 있는 연구용역



보고서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김태석 의회운영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중앙부처의 업무보고 등 정책변화(지방예산정책센터, Pay-go 제도 등)를 모니터링 하여 의회 차원의 선제적 대응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제주지역 크루즈산업의 미래전략산업화 방안 모색

제54차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대표 하민철 의원)는 2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지역 크루즈산업의 미래전략산업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외 크루즈관광 및 제주지역 크루즈관광 동향 분석과 제주 크루즈산업의 파급효과 등을 살펴보고, 크루즈산업의 미래전략산업화 방안과 이를 위한 행정·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하민철 대표는 “제주는 지정학적으로 한·중·일 3국의 중심에 위치하여 동북아 크루즈산업에 있어서 세계자연유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인 제주해녀문화 등 독특한 해양문화 콘텐츠 등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큰 전략산업”이라 전제하면서, “사드 배치 갈등에 대비한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의 계기를 찾고자 이번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책토론회 발제자인 김의근 제주국제대학교 교수는 중국 크루즈 관광 여행사의 초저가 단체 패키지를 통해 면세점과 무료 관광지 방문 형태의 쇼핑관광이 이뤄지고 있어 크루즈산업의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크루즈 관광객 전통시장 유치 인센티브 지원, 여행사의 행·재정적 지원, 전통시장 및 원도심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 개발, 크루즈 관광 전문 인력 양성기관 설립, 크루즈 특구 지정 추진, 특히 2019년 해수부의 선용품 지원센터 제주항 건립에 따른 크루즈 선용품 맞춤형 제품 개발 지원과 대형 크루즈 선용품 회사와 연계한 전문적인 제주 유통 기업 설립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심상진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크루즈관광객이 면세점에 집중돼 수익이 도민에 돌아가지 않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도민을 면세점의 주주로 참여하게 하는 안을 제시했다.

허창욱 의원은 오는 7월부터 강정항에 크루즈선이 들어옴에 따라 크루즈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로·셔틀버스와 관련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제1회 정책세미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는 2월 23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위원장 양승문 前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가 주관해 열린 세미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전에 모색하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미래기획혁신위원회의 활동범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고자 열렸으며, 김태운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미래기획혁신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수행」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미래기획혁신위원회 분과별 위원 2명씩 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진행했다.

신관홍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10대 후반기 도의회가 출범하면서부터 준비해 왔던 미래기획혁신위원회가 8개월여의 기간 동안의 치밀한 사전 준비 끝에 첫 번째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며, “정책세미나 개최를 계기로 미래기획혁신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는 거 같아 무척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그동안 분과별로 진행되었던 작업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기를 희망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양승문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세미나는 의회가 시대적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변화의 중심에서 제대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고자 개최하는 것이다.”며, “분야별 전문가 여러분의 뜻을 함께 모아 미래기획위원



회의 역할과 방향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는 의장 소속으로 의정현안에 대한 도의회 의장의 자문에 응하고, 의정에 필요한 정책과제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문기구로서 2018년 6월 30일까지 운영된다.

행정자치위원회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공모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제348회 임시회 소관 실국 대상 업무보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348회 임시회에서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는 '제주 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사업예정지가 보존가치가 가장 뛰어난 동백동산 습지보호구역과 맞닿아 있고, 사업예정부지 73만8,000여㎡ 중 도유지가 25만2,000여㎡로 곳자왈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사업자는 주민설명회를 가지면서 공유지에 대한 도와의 사전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415억 원을 들여 매입한 옛 탐라대 부지 활용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정계획을 뒷받침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도립 대학·대학원 설립을 제안하였다.

민군복합형관광미갈등해소지원단 업무보고에서는 제주가 화약고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한 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제주해군기지에 미국의 줌월트(스텔스 이지스 구축함) 배치와 제2 공항을 공군기지와 연계한다는 의혹, 알뜨르 비행장에 대한 공군기지 창설 등에 대해 정부로부터 명확한 입장을 확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공모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다. 애초 행정에 관심 있는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모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일선 읍면동에서는 지역별·직능별 대표를 추천을 통해 위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최대 35명까지 주민자치위원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읍면동 재량을 줬으나, 지침으로 인구비례에 따른 정원 조정을 시도했다는 것은 애초 조례 개정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행정체제 개편이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다.

현재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되고 용역을 통해 개편안을 도출할 예정이지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전 도정에서 각 대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뤄진 바 있기 때문에 가능한 상반기 중에 최적의 안을 도출하여 국회의원 발의로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것을 주문하였다.

감사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였다. 감사위원장 선임방식에 있어 현재 도지사 추천 권한을 제3 인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공모를 바탕으로 추천하도록 주문하였고, 감사위원의 경우 피감기관 추천 권한을 배제하고 감사위원회가 공모를 통해 추천하면 의회가 동의절차를 밟고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감사위원장은 상반기 중에 도민사회 공감대를 형성하여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건과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 1건, 민간위탁사무 보고의 건 등을 처리했다.

안건 처리 과정에서 제주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으며 부대조건을 달고 원안 통과시켰다.

수정계획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될 제주도의 개발·경제·산업·복지·환경 등을 망라한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지속가능한 공존, 스마트 제주'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주요 추진전략으로는 △환경자원 총량관리 시스템 제도와 △제주형 계획허가제 도입 및 실행 △해안별 그린벨트 도입 및 실행 △청년뱅크재단·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데이터센터 설립 △아일랜드형 스마트시티 구축 △전기자 특구 조성 등을 제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심사에서 부대조건으로 최소 2년 정도의 현황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2019년에 환경자원 총량관리를 재산정할 것을 주문했다. 해안별 그린벨트 도입 및 실행에 대해서는 해안변의 용도지역, 수변 경관지구, 관리보전지역 등의 각종 중복지제행위에 대한 관리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제시돼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제주특별법(140조)상 2차 종합계획에 포함돼야 할 17개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지표 마련도 보완사항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환경자원 총량 관리에 따른 갈등 야기, 사유 재산권 침해,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등의 사안을 집중 제기했다.

4·3특별위원회 본격적 활동 가동

제2차 회의 통해 올해 활동계획 채택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에 대한 입장'도 발표



내년으로 도래한 4·3발발 70주년을 앞두고 4·3특별위원회의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지난 2월 16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한 4·3특별위원회(위원장 손유원)는 올해 말까지 추진할 활동계획을 채택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4·3특별위원회 활동 백서 발간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건의 △위령사업(희생자 유해 발굴 등)에 대한 국가지원 건의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노력 △기타 4·3 관련 주요 현안 해결 등을 목표로 활동을 펼쳐나가게 된다.

우선 백서 발간과 관련해서는 지방의 회가 부활하던 지난 '91년부터 줄곧 활동

해오다 중단되었던 '4·3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가감 없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데서 출발한다.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는 최근 도민과 유족들 사이에서 밀도 있게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4·3특위에서는 법적인 배상이나 보상의 논리를 확보하는 한편, 4·3특별법의 개정이나 '4·3사건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방침이다.

위령사업(희생자 유해 발굴 등)에 대한 국가지원 건의와 관련해서도 2006년도부터 2011년 도까지는 국비지원을 받아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2010년 이후 지원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2017년도 예산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던 10억6백만 원의 예산도 불발로 그쳤다. 특히 내년이 4·3발발 70주년임을 감안하면 미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4·3 희생자 추념일의 경우도 지방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매해 4월 3일이 국가 기념일(4·3희생자 추념일)로 지정되긴 했지만, 범도민적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법적



검토를 거치고 외국의 사례(오키나와) 등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이외에도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의 상설화, 국정교과서의 올바른 4·3역사 기술, 4·3유적지 정비·복원 및 문화재 지정, 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해결과제들을 꼼꼼히 챙겨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한편, 4·3특위는 이날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에 따른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 4·3사건에 대한 왜곡·축소 논란을 빚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기와 함께 국회의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촉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 의원)는 제348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여성국, 안전관리실, 양 행정시 등으로부터 올해 업무를 보고받았다.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정책 및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 여러 현안 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업무보고를 통해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및 이혼 등 위기가정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청하고, “탐나는 5060” 정책에 대한 보완, 제주지역의 부동산 지가 급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주거 지원금액 현실화 등을 주문하였다. 또한, 가족 친화 기업의 확대, 4·3 70주년에 대비하여 4·3 여성사 정리 및 읍면동 복지 허브화에 대한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개편 등을 통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 전반에 대한 정책을 다루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모범음식점 선정 및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마련, 서귀포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개관에 따른 지역주민 욕구조사 등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더불어 가출청소년 쉼터 정원충족률(40~80%)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교통문제와 관련하여서는 8월부터 시행되는 대중교통 체계개편에 따른 중앙차로제, 복합환승센터, 준공영제, 공공업화 등 관련 업무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분석·검토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도내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어서 사고 다발지역에 교통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제안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요청하였다.



더불어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사고원인 및 대책 등을 안전컨트롤타워인 안전관리실을 주축으로 특별 점검팀을 구성하여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취약시설 집중점검을 요청하였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잠실 광역환승센터 등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김용범 위원장)는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교통혁신 및 대중교통 체계개편 시행에 따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서울시를 방문했다.

첫날에는 지난해 12월에 완공된 잠실 광역환승센터를 방문해 그간의 추진경과 등을 청취했으며, 향후 제주도에서 추진하게 될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다음날에는 서울시 교통본부를 방문해 버스준공영제와 버스중앙차로제와 관련한 추진경과와 문제점에 대해 현황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도민 건강증진 위한 걷기 활성화 정책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주보건소(소장 송정국)와 함께 2월 9일 오후 3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걷기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민들이 걷기운동을 통해 건강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지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 제1 주제 발표에 나선 보건분야 전문가인 고광욱 교수(고신대학교 예방의학과)는 ‘신체활동 활성화 전략 : 움직이는 제주’라는 주제로 “활동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모든 분야의 이해 당사자와 협력하여 인적자원, 물리적 환경 구축, 정치적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 주제 발표는 도시환경분야 전문가인 박소현 교수(서울대학교 건축학과)가 나섰다.

박 교수는 ‘동네걷기 동네계획 : 보행증진에 대한 최근 고민’이라는 주제로 건강을 포함하는 도시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존의 교통정책, 주거정책, 도시기반시설정책, 원도심재생정책 등에서 새로운 실천전략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경기도 시흥시, 경북 포항시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선 강익자 의원(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학 의원(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호진 대표(제주주민자치연대)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여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항공 콜센터 철수 계획에 대한 문제점 지적

제348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도시건설분야 업무보고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항공 콜센터 철수계획에 대한 제주도의 명확한 입장, 제주공항에 과전된 본부장의 역할과 제주항공의 “제주” 브랜드에 대한 검토, 구국도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 회전교차로 적정 설치문제, 제2첨단과학기술 단지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도시계획 사전 협상제 제도 도입 검토 등을 주문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수립용역 착수시기가 다소 늦춰지더라도 성산읍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 협의체 구성 등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아픔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운항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지난해 11월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고, 일본 관광객 확대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제주-일본 직항 노선의 추가 확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다.

제주항공이 제주에 있는 항공권 예약 콜센터를 폐쇄하고, 서울지역 콜센터로 이전하겠다고 밝혀 갑작스러운 이전으로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제주지역 콜센터 직원들은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모든 의원들이 항공기에 ‘제주’ 브랜드도 반납해야 한다는 등 한 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주항공은 제주도가 50억원을 출자해 애경과 공동 설립한 기업인데, 제주도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면서 제주도의 무책임한 행정에 답답해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제주도는 이번 기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제주항공



이 제주도민의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진지한 검토에 나서야 한다”며 “제주항공은 콜센터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콜센터를 이전하려면, 당장 항공기에 ‘제주’라는 이름을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이번 사태 해결을 주문하였다.

쓰레기 배출 요일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 필요

쓰레기 배출 요일제는 지난 2016년 12월 제주시, 2017년 1월 서귀포시에서 각각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복잡한 배출방식으로 인한 혼선, 품목별 주 1회(플라스틱 주 2회) 배출로 인한 불편 등으로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품목별 배출 가능 일수에 대한 조정, 상가·외곽지·복지시설 등 배출원의 특성에 맞는 대책 마련,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정책에 반영되어 환경을 지키고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쓰레기 문제를 도민들에게만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구좌읍 동북리에 조성되고 있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문제도 지역주민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여 도내 매립장

의 포화, 소각장 노후화로 인한 처리 지연 등 조만간 닥칠 쓰레기 대란에 발 빠른 대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 제도 시행이 10년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 그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특히, 관광객 증가로 인한 클린하우스 시스템에서의 배출방식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국립공원 지정은 도민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해야 할 것과 음식물 감량기 보급사업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석산 사업으로 인한 대기 질 오염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9건의 안건심사 실시

이번 제348회 임시회 기간 환경도시위원회는 도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도민사회의 관심이 높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심사를 했다.

가장 먼저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권자본금 5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올리고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도 1억 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사업 분야의 적절성 등을 살펴봐야 하는 바 의결보류 되었다.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결제시의 건은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 및 당위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국비 확보 등 집행부의 노고를 위로하나 관덕정 광장 복원사업 주민설명회의 파행 등을 살펴봤을 때 주민 의견 수렴과 합의 과정이 부족한 듯 보이고 주민 의견 수렴과정의 적절성과 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계획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기 위해 심사를 보류했다.

특히 마지막 안건으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시간여라는 마라톤회의 끝에 난개발의 심각성과 방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도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상대적 약자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등의 문제로 의결보류 되었다. 성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비롯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은 동의 또는 수정가결 하면서 이번 임시회를 마쳤다.

“제주공항 쓰레기 대란! 해결방안을 찾아라!”

도의회-도-관계기관 정책간담회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의원)는 2월 23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공항 쓰레기 대란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도민 사회의 큰 걱정거리로 대두된 제주공항 쓰레기 문제는 제주공항 국제선 대기실에 면세품 포장지 등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면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현장 사진이 SNS 등을 통해 전파되면서 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슈화되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를 중심으로 면세점 관계자들이 회의를 가지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제주공항은 제주의 관문으로 도민 사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현 사태의 당사자인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한국면세점협회, 신라·롯데 면세점 등의 간부급 관리자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 그리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현재까지 도출된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각 분야의 역할을 확인하고 더 나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다.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은 “제주공항은 제주의 얼굴이며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중요 인프라 시설로 제주공항에서 생기는 문제는 도민의 문제이며, 우리 위원회는 도민들의 우려를 관계기관에 전달할 의무가 있고 같이 고민해나갈 책무가 있다고 본다.”면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여러 사람이 토의하면서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 좋은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해 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신화역사공원 현장방문, 진행상황 점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의원)는 2월 14일 신화역사공원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청취하였다.

신화역사공원은 제주의 신화, 역사문화 및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와 유럽 등의 신화, 역사, 문화를 핵심테마로 한 휴양, 식음, 쇼핑과 위락이 어우러진 복합리조트로서 2조 4,129억 원을 들여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사업주체를 보면 J지구는 JDC에서 민간투자를 계획 중에 있고, A,R,H지구는 램정제주개발(주)이 시행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에 R지구의 일부 준공을 시작으로 2018년 하반기에 3개 지구가 모두 준공될 예정인데, 지난해 가을 공동시행자였던 말레이시아 젠팅사가 빠져나가고, 올해 초 공사장 붕괴사고로 인하여 도민사회에서 우려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

이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는 램정제주개발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카지노의 운영계획 문제, 제주청년고용문제, 공사장 안전사고의 문제점들을 논의하였고, 준공할 때까지 외국인투자 지구로서의 당초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제주포럼 기본계획 등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정책 질의



2017년 첫 의정활동으로서 2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열린 제348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보고받는 한편, 2017년 제주포럼 기본계획 및 사무의 위탁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사무로는 관광분야에서는 해외시장 개척의 필요성과 계속 증가하고 있는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전략방법의 문제점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행해진 PCO행사 90%가 행정에서 수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소극적인 PCO대행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문화예술예산 역시 2016년 이미 1천억 원이 넘었으나, 도민의 문화지수는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하면서, 예산 대비 문화예술정책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제주 4·3 70주년을 맞이하여 제주포럼에 4·3세션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위킹그룹에서 권고된 한라산과 성산일출봉의 입장료가 결정된 사항이 아님에도 정책협의된 것처럼 오도되고 있어 도민들 및 관광객의 혼란만 부추기는 정책에 대한 질타와 근대문화유산으로 평가된 제주시 시민회관과 서귀포시 시민회관이 철거될 위기에 처함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그 외에도 제주어 사용에 대한 의무화 방안을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어 보전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안」이 수정가결 되었고, 제12회 제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기본계획을 보고 받은 후, 로케이션 유치 지원 공모사업 등 23건의 사무의 민간위탁 사업이 심사되어 동의하였다.

제각각 추진 도시문화재생, 한눈에 살펴본다 제주문화관광포럼 정책간담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문화관광포럼(대표 이선화)은 “2017 원도심 문화재생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월 21일 삼도이동 2층 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원도심의 노후화와 공동화 현상으로 오랫동안 삶의 흔적이 축적됐던 도시 내부가 상대적으로 기능이 약화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부서에서 문화 도시재생 정책, 문화예술 지원정책 등이 시행되는 가운데, 오히려 젠트리피케이션과 문화백화현상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통합적, 통찰적 시각에서 사업들을 살펴볼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제주문화관광포럼에서는 구) 제주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서별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사업추진의 문제점과 사업방향들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듣는 자리를 마련

했다.

현재 진행되는 문화재생사업으로는 도 문화정책과, 도 도시재생과, 세계유산본부, 제주시 문화예술과 등 4개 부서와 제주문화예술재단, 도시재생센터, 영상위원회 등 3개의 출연기관에서 2,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간담회는 각각의 추진부서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재생 사업현황에 대해 제주대 김태일 교수가 발표한 후 지역주민과 행정간 간담회 형태로 진행됐다.

이선화 대표의원은 “원도심 문화재생이 많은 부서에서 진행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이해도가 떨어져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안 되고 있어, 총체적 사업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거시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처리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의원)는 제348회 임시회에서 2017년 소관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 대상은 경제통산산업국 등 15개 소관부서 및 공사·출연기관으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논의된 사항에 대해 앞으로 업무추진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업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였다.

이번에 심사된 주요 안건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해 도내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 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발의한 사항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상임위 소관 조례에 대해 법제처 권고사항인 약어 통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 일반정비에 따라 개정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은 김경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특화농산물의 출하 조정과 품질 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적정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출하하는 세척 농산물을 생산 및 출하 조정에 제외하도록 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농기계 이용효율의 극대화와 농업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작업 대행의 근거와 임대 대상 농기계의 선정방안 등을 마련하였고,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경영개선,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크루즈연계산업 국내외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쟁점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조천읍 지역 감귤농가 등 현장방문 실시



2월 15일에는 품질이 우수한 고당도 감귤을 등급화하여 생산 및 출하하고 있는 조천읍 지역 현장을 찾았다. 2016년산 노지 감귤은 알맞은 기상여건과 고품질 감귤 생산에 재배 농가의 노력이 함께하면서 맛과 품질이 매우 좋아 소비자가 믿고 찾고 있음에 따라 2월 도매시장 평균 거래가격이 24,000원/10kg으로 형성되는 상황에서 고품질 감귤을 생산 및 유통하는 조천읍 지역 농장과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다. 현장 방문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온정성과 열정을 가지고 고품질 감귤을 재배하는 농가의 노고에 대해 힘찬 박수를 보내고, 이어 감귤농협에서 운영하는 감귤 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는 비파과 광센서에서 선별출하하는 시

스템 확인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 등 종사자를 격려하기도 하였다. 또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차원에서 맛 좋은 감귤을 생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토양피복 사업 확대 및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높은 이랑재배와 소규모 광센서 선과기 보급 사업 확대, 소비 추세에 맞는 감귤조례 조속한 개정 등을 함께 동행한 집행부에 주문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농업 분야, 축산 및 수산업 등 1차 산업과 재래시장 등을 수시로 찾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소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 활동을 할 계획이다.

축산사업장 냄새 저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의원)는 2월 21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축산사업장 냄새 저감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축산악취 민원이 지난 2013년 304건에서 지난해 666건으로 연간 30%씩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거지역의 확대에 의해 민원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수축경제위원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우범 위원장은 “제주 축산업은 국민 식생활의 서구화 영향으로 인해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지역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 발생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상생이 필수요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냄새 저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그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축산환경학회 회장을 맡은 김두환 교수가 「제주 축산업의 지속가능을 위한 축산냄새 관리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고한중 교수(한국방통대), 김경원 축산과장(도), 김용주 주민자치위원장(한림읍), 김태우 냄새혁신위원장(양동발전협의회), 양한식 생활환경과장(도)이 토론자로 나섰다.

교육위원회

단설유치원 설립, 노후 학교 안전진단 실시 서둘러야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성균 의원)는 제348회 임시회 기간 내(2.7~2.16) 도교육청을 포함한 2개 시교육청과 8개 직속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심사와 청원에 대한 안건을 처리했다.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의 반영 여부, 지난해와 비교해서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나 특색사업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기관별로 기관의 특성을 살린 특색사업과 중점사업에 대한 연구 및 사업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향후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과 체계적인 실행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 예산 운영과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황국 의원은 직속기관 인력 부족 및 소규모 병설유치원에 의존하는 제주지역 유아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동지역 중학생에 대한 수학여행비 지원, '청소년의 거리'에 예산을 적극 투입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JCC 오라관광단지 및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도로개설 문제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하며, 도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에 중장기 추진으로 분류된 단설유치원의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현 의원은 정착 이주민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도교육청 사업의 명칭이 한자어나 제주어를 많이 사용한 것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30년 이상 노후학교에 대하여 안전진단 실시에 근간을 두어서 철저히 내진보강계획을 세워 설계 및 학교 증설 등에 신중을 기할 것과 작은 학교 살리는데 적극적인 행정과 예산 지원 및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윤춘광 의원은 도교육청 공무원의 높은 이직률을 지적하면서 장기 재직자들이 직장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호봉제를 적용할 것을 적극 주장했다. 제주도 학교폭력문제가 저학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비한 교육정책을 세워야 하며,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등의 중학생 학업중단 예방에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시백 의원은 유치원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에 따른 수업의 질 저하를 우려했다. 전국에 단설유치원이 300곳을 넘는 데 반해 제주에는 한 곳도 없다며 원장·원감 자격을 가진 교원인력이 앞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상위자격 교원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도 단설유치원의 설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문화 학생의 높은 학업중단율, 대책 마련해야

구성지 의원은 도교육청이 '질문 있는 교실 수업'을 기치로 내건 것에 대하여 사례별 연구를 하고 정책 틀을 만들어 그 운영 방향성을 일선 학교에 제시하길 요구하였고, 2016년 기초학력이 전년에 비해 많이 개선됐지만 전국 평균에 못 미쳐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다문화 학생의 높은 학업중단율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학교폭력 문제가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연극 등의 문예적인 선도방법을 마련하는 등 창의적이고 특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주요업무 보고 시 여러 의원이 최근 자율학교 내부형 교장공모제 문제에 대하여 집중 추궁이 이루어졌다. 교육감 취임 이후 4개 자율학교 내부형 교장 공모 결과 특정 교원단체 편중 논란에 대해 모호한 기준 적용과 운영주체의 제도 악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부공남 의원은 인사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가졌으며,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심사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여 교육청 내부인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사위원 위촉 시 합법적인 교원 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심사위원 체점 시 무기명으로 하는 등 절차상 맹점을 보완해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신중한 인사 주문

오대익 의원은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가진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에게도 기회를 주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하여 조직개혁을 변화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는 냉소주의를 없애려면 인사를 신중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무리 훌륭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라 해도 이런 분위기에서는 냉소주의·패배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으며, 구성원들 사이에 냉소주의가 팽배한다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광수 의원은 내부형 교장 공모를 하는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내부형 교장 공모신청은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원도 가능하므로 지원 자격을 정규 교장 승진보다 더 까다롭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제주특별법 시행령의 자율학교 특례에 기반을 두면서 실제 기준은 교육부 지침을 원용하고 있다며 교육부 지침만으로는 평교사 비중이 15%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시행령을 갖다 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특별법 시행령 활용에 앞서 교육청이 도의회와 학부모, 사회단체 등과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특히 담임·부장 경력 등 철저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균 위원장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의원들이 도민의 대표로서 보완해야 하는 부분과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자리라고 당부하면서 새로운 것을 도입함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지 말고 교육에 대한 고민과 의지를 담으라고 당부했다.

교장초빙제 문제 관련 법은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 및 지극히 일반화된 기준일 뿐이며 수용되지 아니하는 법은 특정인을 위한 특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현장에서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독서 및 인성교육 관련 다양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 배움터 지킴이 봉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특수교육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할 것 또한 주문했다.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춘광·부공남 의원과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은 2월 2일 도민방에서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교육청과 직속기관, 각급학교에서 운영중인 교육공무직에 대한 근본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하여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교육공무직의 이직율과 호봉제 적용, 교원 및 교육행정직과 동일한 근무시간 적용 등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 모색이다.

토론회에는 윤춘광·부공남·강경식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관계자와 교육공무직원,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교육청 및 직속기관, 각급학교에는 20여개 분야에 1,800여명의 교육공무직이 근무하고 있다.

윤춘광 의원은 "도청과 도교육청에는 일반공무원 이외에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도청 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 평균 이직율이 1.97%인데 도교육청 소속의 교육공무직은 3.1%이



고, 특히 급식보조원의 경우에는 3.39%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입법정보



법령 제·개정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동의비율을 8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완화하여 리모델링 활성화 도모

대통령령 제27860호, 2017.2.13. 일부개정 시행 2017.02.1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되, 2회 이상의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하나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쟁입찰의 방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데에 맞추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의 최저 입찰자 수를 경쟁입찰의 종류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거나 동(棟)을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의 동의비율을 8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완화하여 리모델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규정을 신설

법률 제14569호, 2017.2.8. 제정 시행 2018.2.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다수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연·중단되고 있으며 구도심 쇠퇴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빈집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고 도시 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애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으나, 빈집에 대한 정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고 빈집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등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한 실정임.
- 또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주요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은 미흡한 수준임. 특히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에 대한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요구됨.
-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규제완화, 임대주택건설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 임대관리업무 지원,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로굴착지점 및 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 등에 대해 전자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공고 2017. 2. 3. (국토교통부장관)

◆ 개정이유

- 도로굴착지점 및 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 등에 대해 전자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표지 등의 설치기준

도로 지하매설물의 표지 설치대상에 가스공급시설, 송유관, 송전선로, 전기통신관, 송열관, 광역상수도시설, 지방상수도, 공업용수도, 수도 외에 그 밖의 지하매설물도 도로관리청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설치하도록 하고 전자정보를 표지에 삽입 또는 부착하여 보다 많은 매설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 정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 발 의 일 : 2017. 02. 10. • 회 부 일 : 2017. 02. 1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어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아 노사관계의 혼란이 지속되고 법적 불안정이 초래됨.
- 지난 9·15 노사정대타협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입법화하기로 하였음.

◆ 주요내용

통상임금의 정의규정은 명확한 기준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억제해서 종래 이루어져 온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 규정한 통상임금 규정을 근거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하고, 나아가 행정규칙에 불과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근거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행정부가 판례와 다르게 축소 해석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최저 근로조건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왜곡해 왔던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함.

이에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개념을 소정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모든 금품으로 정의하고, 정의규정을 보완해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됨을 원칙으로 명시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는 경우의 사유를 법률에서 한정하여 예시하고, 제외되는 경우가 남용되어 결국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는 제외될 수 있는 범위를 다시 명확히 한정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2조제1항제7호).

법령 해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타인에게 골재채취를 위탁할 수 있는지(「골재채취법」 제22조 및 제26조 등 관련)

[법제처 16-0605, 2017.02.02, 김해시]

〈사례 예시〉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하되(본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資産),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긴급재해복구 등을 위해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골재채취 능력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직접 갖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사용하여 골재채취를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다른 자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사용하여 골재채취를 하도록 할 수 있는지?

*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직접 갖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사용하여 골재채취를 해야만 합니다.

【이 유】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재해복구와 군사시설, 마을 단위의 공익사업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제2호) 등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골재의 수요·공급 상황(제2호),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제6호), 같은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제7호)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재채취법」 제22조의3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적정한 골재채취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 실적, 자본금, 골재채취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직접 갖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사용하여 골재채취를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다른 자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사용하여 골재채취를 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골재채취허가신청서의 허가신청인란에는 골재채취업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고, 첨부서류란에서는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과 사업계획서(골재채취방법,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 등을 포함함) 및 「골재채취법」 제22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의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한 골재채취 능력 평가결과서 등을 첨부서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는 동일 순위의 골재채취 허가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결과에 따라 배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0조제2항에서는 골재채취기간도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본금 또는 자산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 중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를 위한 허가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허가 신청인의 사업계획과 골재채취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골재 채취기간·채취량·채취방법 등을 정하여 골재채취 허가를 하는 것인데, 만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 이를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다른 자에게 자유롭게 위탁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골재채취업 등록제도 외에 별도의 골재채취 허가제도를 두어 엄격한 절차를 거쳐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골재채취를 허가하도록 한 「골재채취법」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골재채취법」 제26조에서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골재 채취기간·채취량·채취방법 등 골재채취 허가의 내용이 그 허가신청인의 골재채취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정해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허가의 내용에는 허가신청인이 직접 골재채취를 하라는 의미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 이를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다른 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골재채취법」 제26조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골재채취법」 제25조에서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허가받은 내용 중 “채취구역, 채취기간, 채취량, 채취방법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 사안과 같이 “허가받은 자의 지위”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허가받은 내용의 변경승인을 받거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 골재채취를 위탁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직접 갖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사용하여 골재채취를 해야만 한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행정자치부

2017년도 1,152개 읍면동에 복지허브화 확대 추진

– 연말까지 누적 2,246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복지허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예정이다.
- 금년에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전담팀이 전국적으로 2배 이상 확대되어 어려운 이웃을 먼저 찾아가 도와주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순익)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올해 복지허브화가 추진되는 읍면동 지역을 발표하였다.
- '17년 1,152개 읍면동이 복지허브화 추진 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었고, '16년 이미 추진된 1,094개 읍면동을 포함하면 전체 읍면동(3,502개)의 약 64%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올해 말이면 총 2,246개 읍면동 주민들이 찾아가는 상담, 맞춤형 통합지원 등 복지허브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 1,152개 읍면동 중 618개 읍면동은 ‘기본형’ 복지허브 모델로 그동안 신청·접수 위주의 기존 복지 외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전담팀을 신설하게 된다.
- 534개 읍면동은 ‘권역형’ 모델로서 180개 중심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어 인근 일반읍면동 354개까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와 관련, 읍면동복지허브화추진단에서는 2.15일부터 3.3일까지 올해 복지허브화 추진 방안에 대한 시·도별 정책설명회를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개최하여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도울 계획이다.
- 또한,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신속하게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군구와 시도의 추천을 받아 성공 노하우를 공유·확산할 「'17년 복지허브화 선도지역」36개 읍면동을 선정하였다.
- 남지읍(경남 창녕군), 망미1동(부산 수영구) 등 올해 선정된 36개 선도 읍면동은 작년도에 활발한 민·관협력을 토대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탁월한 성과를 이룬 지역으로, 선도지역은 후발 지자체에서 내방하는 경우 노하우를 교육하고 운영자료를 공유할 뿐 아니라, 인근 지역 지원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 이는 성공사례의 경험이 널리 전파되어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지자체의 전체적인 맞춤형 복지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한편, 2016년에 먼저 복지허브화가 된 1,094개 읍면동에서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방문상담 1,067천 건을 실시하고, 복지사가 지대를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912천 건을 제공하는 등 본격 추진 첫 해부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행자부와 복지부는 “'18년까지 전국 3,500여개 전체 읍면동의 복지허브화를 추진하여 모든 지역 주민이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복지사가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촘촘하게 찾아서 도와주고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가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읍면동의 복지허브화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2017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새일센터 5개소 확충, 창업지원 강화,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훈련과정 확대 등 –

- 올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중심으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창업 지원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 우선, 새일센터 서비스가 확대되고 창업 지원이 강화된다.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꿈날개’, dream.go.kr)를 확대(8개 시·도→전국)해 전국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올해 안에 새일센터를 5개소 확충해 전국 155개소로 늘린다.
 - 특히, 온라인 취업지원서비스에서 종전에 각 단계별 상담사가 있던 것과 달리 신규로 1:1 ‘전담상담사’를 지정·운영하며 역량진단과 직업교육, 모의면접까지 밀착 지원한다.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창업지원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창업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광역·농어촌형 새일센터 중심으로 ‘창업담당 매니저’를 지정하는 등 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 또한,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이 한층 내실화된다.
 - 정보통신기술(IT), 콘텐츠 등 미래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훈련과정을 확대(25→35개)하고 참여대상*도 넓힌다.
 - *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도 참여 가능
 - 직업훈련과정의 현장 실습비중을 확대*하고 현장 훈련비 지원이 가능해지는 등 현장 훈련이 강화된다.
 - * 직장 내 훈련, 포트폴리오 제작·발표, 기업프로젝트 참여 등 현장 실습 비중 10% 이상 구성
- 여성가족부는 2월 9일(목) 아모리스 타스퀘어(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새일센터 종사자들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워크숍(연수회)’을 개최하고 이 같이 개선된 사업 방향과 개정된 지침내용을 공유했다.
-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평가 결과 선정된 우수 기관 및 유공자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총 45점)도 수여했다.
- 우수 지자체로 대구, 인천, 경기, 충북, 전북이, 우수 새일센터로 서울서부센터, 광주광산구센터, 천안센터, 익산센터 등 17개소가 선정됐다.
- 경력단절여성 채취업과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 민간 기업으로는 ㈜원앤씨(충북), ㈜뉴과워프라즈마(전북), ㈜베스트에프에이(경남) 등 10개 사가 선정됐다.
- 박난숙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가 15만 3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1만 3천여 명 증가했으며, 올해에도 경력단절여성이 더 나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새일센터 서비스를 강화하고, 직종·산업별 협회와 협력하여 틈새직종을 발굴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부정수급자의 비용 징수 절차 마련 및 소득·재산 조사 결과 통보 기한 단축 –

- 교육부는 2월 14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절차 마련 및 소득재산조사 결과 통보 기한 단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개정(’16.12.20, 시행일 ’17.3.21.)으로 교육비를 부정 수급한 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비용의 징수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현재 40일 이내인 소득·재산 조사 결과 통보 기한을 30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결과 안내 및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와 동시에 신청한 경우 비슷한 시기에 결과를 통보받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 * (교육비) 4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70일 이내)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91조
- ** (교육급여)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 ※ 교육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 교과서·입학금·수업료 지원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을 각각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 '17년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8천억 원이며, 90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30만원)까지 연간 최대 276만원 상당을 지원받는다.
-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3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 교육부 관계자는 “부당한 교육비 수혜를 방지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소득·재산 조사 결과 통보가 빨라져 신청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

2017년 도의회의 주요업무 보고, 발전방안 등 모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가 2월 21일 신관홍 의장과 의원, 고점유 위원장과 의정자문위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2017년 도의회의 주요업무 보고와 의견수렴을 겸한 이번 회의에서는 의정자문위원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신관홍 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올 한해 제주의정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를 드리고, 의정자문위원들의 의견과 협조를 구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말하고 “제주의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정책을 제언해 주신 자문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신관홍 의장은 이어 “제주의 현안들이 정말 많다.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만으로는 현미경처럼 현안 곳곳을 다 들여다볼 수 없다. 오히려 지역에, 또 민원현장 가까이 계시는 자문위원님

들이 더 잘 알고 있는 문제이고, 또 그 처리 방향까지도 꿰뚫고 계신다.”면서, “여러분들은 기초의회가 없는 제주의 지방자치 환경에서 기초의회 의원과 같은 역할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역할 하나하나가 곧 지역의 민원과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항상 가슴에 묻고 지역을 살펴 주시고 도의회에 기탄없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고 부탁했다.

한편 고점유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의정자문위원들이 의정과 도민을 위해 역할이 중요하고, 의정자문위원들의 현장의 목소리들이 곧 의정 발전과 도민을 위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자문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자문위원회와의 업무공유를 통한 의정 활동지원 강화 및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서 56명이 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자문하고 있다.



시민감시관 제3기 의회 옴부즈맨, 본격활동에 기지개 켜다

2017년 주요사업 추진 및 운영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시관인 제3기 옴부즈맨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도의회는 2월 22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신관홍 의장과 제3기 의회 옴부즈맨 40여명, 관계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관홍 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제3기 옴부즈맨이 구성된 지난 3개월 동안 시민감시관으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해주고 계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라며 “마찬가지로 시민의 불평은 무엇인지, 불편은 없는지를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고,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의 권리가 커지고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라고 옴부즈맨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신 의장은 이어 “스웨덴에서 시작된 이 제도를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도의회가 옴부즈맨 제도 운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도 공무원

들의 정당한 이유 없는 민원거절, 사무처리 지연, 불친절, 무사안일 등 바람직하지 못한 근무 행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주면 그것을 바로 잡아 투명하고 공정한 제주를 구현하는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신 의장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방자치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을 올바르게 수립, 집행할 수 있도록 제안과 정책건의를 활발하게 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의회도 옴부즈맨들의 제안과 건의, 의견을 의정에 그대로 반영하고, 또 옴부즈맨 여러분들이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도와드리겠다.”고 밝혔다.

제3기 옴부즈맨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2년 임기이며, 인원은 총 60명으로 지난 제2기 47명보다 13명이 늘었는데, 이는 다문화 및 정착주민, 또 본인의 신청 등에 기인한 것이다.

말 못하는 사람들의 나라

전북대 전자공학부 교수 이 문 호

세상에 말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귀도 있고 눈도 있고 몸도 있지만, 다리(足)와 입(口)이 없습니다.

검은 얼굴이고 키는 아주 작은 원형 사람도 있지만, 키 큰 타원형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서로 살을 붙여 수놓면서 쾨 담(塼)을 만들고 쾨 당¹⁾을 이뤄서 살아갑니다.

바람, 비, 햇볕, 파도, 오름, 노란 감귤이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몇 천 년을 살아도 늙지 않습니다.

요즘은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와 미세 먼지로
잠을 잘 때도, 숨을 쉴 때도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입(口)²⁾을 달아주면,
갑인년 흉년에 살아났던 이야기, 4·3에 불타는 한라산 이야기며,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술술 들려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할 말은 하면서 바르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제주 나라의 돌(石)입니다.

청탁금지법 Q&A



우리 생활 속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알아봅니다.

Q: 병원 입원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부탁해도 안되나요?

A: 국립대 병원의 입원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의 내부기준, 사규 등을 위반해 특정인에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입원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입원 대기자가 제3자인 친구를 통해 부정청탁을 했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대기자를 위해 병원 원무과장에게 청탁을 해준 친구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원무과장은 부정청탁에 따라 접수순서를 변경해 먼저 입원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사립대 병원이라도 청탁을 들어준 사람이 의사이고, 대학교수를 겸임하고 있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누구도
부정청탁·금품수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주기전 **30초**,
반기전 **30초**.

30초의 생각이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주 1. 쾨당의 어원은 쾨담의 제주인의 입말(口語體)을 닮아 쾨당이 됐습니다.

2. 돌의 입(口) : RFID Tag나 센서를 돌에 붙이고 휴대폰으로 Scan 하면 “돌이 말”을 합니다.
IoT(Internet of Things) 4차 산업혁명의 바람으로 제주 돌들이 말을 하게 됩니다.